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 진단과 과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 진단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차례

- 06 서문
- 12 정세전망 **문재인 시대, 한국사회 전망**
3% 경제성장 구현, 지속가능한가?
사람중심 경제의 모순과 한계
대책 없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
길을 잃은 적폐청산 논쟁
대안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
- 34 총론 **민주노총 20년, 평가와 과제**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건설 20여 년,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교섭과 투쟁
초기업노조 운동을 실현하자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로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 조직화로 실현하자
민주노총 리더십
- 52 제언1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새 구상을 위한 시론**
새로운 노조운동을 위한 주체형성 전략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년노동의 위치
청년노동시장의 특성
수출재벌들의 전초기지, 21세기 신산업에 몰려있는 청년노동자들
새로운 노동표준을 위한 청년들의 요구
20~30대 조직활동가의 육성, 청년조직화센터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청년 민주노총을 위하여

- 66 제언2 **한국형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조건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은 가능한가
 노동자운동의 대응 방향
- 88 제언3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실질적 평등에 앞장서자**
 여성노동자의 현실 - 불안한 고용, 벌어진 임금격차, 길어진 무급노동시간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민주노총 여성사업의 진단과 과제
 성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
- 104 제언4 **전쟁 위협, 노동자들의 '평화연대'로 맞서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대화의 장은 열릴 것인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인도-태평양 전략
 평화를 위한 노동자운동을 확대하자

서문

2017년 민주노총 9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선거에 즈음해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 진단과 과제>라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이번 소책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시대, 한국사회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투쟁의 효과와 보수야당의 자멸로 인해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경기순환적 회복국면을 맞아 행운에 가까운 경제실적을 체험하고 있으나 이런 호조건이 오래 갈 수 없으리라 진단한다. 특히 특권과 지배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재벌체제가 온존한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도, 혁신성장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박근혜-이재용 게이트가 '87년 체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며 개헌을 약속했지만 실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단다는 애초의 개헌 취지마저 실종될 상황에 처했다.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어떤 정치세력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민주노총 20년, 평가와 과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난 20년간 지속된 민주노총의 전략이 대중적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바로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부적·외부적 압력에 의해 민주노총이 균열·약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은 수출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을 주축으로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전체 노동자 대비 노조조직률은 정체를 하락했고,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률이 격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교섭 체계 내에서 기업별로 전투적인 투쟁을 벌여 임금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은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기에는 노동자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효성이 다했다. 물론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투쟁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했으나, 그 이상으로 노동자 간 격차 확대를 저지, 완화할만한 구조적인 전략을 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기업별 교섭·투쟁을 넘어

서 초기업적 교섭·투쟁을 새로이 창출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업종이나 지역이나"라는 단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초기업적 공동투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느냐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은 특히 산별노조 구획을 넘어, 가능한 부문부터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돌려주고 기업을 넘어선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의 교섭·투쟁·조직운영 전반을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새 구상을 위한 시론〉은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청년노동자 조직화 문제에 주목한다. 청년세대의 기준을 25~39세로 설정해 분석해보면, 20대 청년빈곤을 감내하며 취업준비생을 선택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 20대 후반에 취업한 곳은 재벌 대기업들이 수직적으로 하청계열화한 부품사-운송기지이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시킨 사회서비스 관련 신규 일자리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에서 체험하는 노동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최소기준을 무너뜨릴 만큼 바닥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촛불투쟁을 거치며 현대차 위아-모비스-만도헬라 등 자동차 핵심 부품사에서부터 인천공항, 파리바게트 등 곳곳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설립 문의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흐름을 조직화 사업으로 수렴해야 하며, 특히 20~30대 청년 조직활동가 육성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청년조직활동가 학교’와 같은 기관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노동자, 대학생, 반(半)실업자 등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교류하고 입장을 모아내기 위한 ‘청년노동자 대회’와 같은 사업도 필요하다.

한편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분석한다. 현재 시점에 사용자 측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의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총자본과 총노동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국적 노사협상체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산별교섭체계조차 없다. 사용자 측은 사업장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다. 이런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그 자체를 강조할 뿐, 대화기구에서 다룰 시급한 의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의 참여 의지가 낮고, 논의해야 할 의제도 불분명하며, 설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의회 다수당의 지지)이 취약하다는 점을 볼 때, 짧은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협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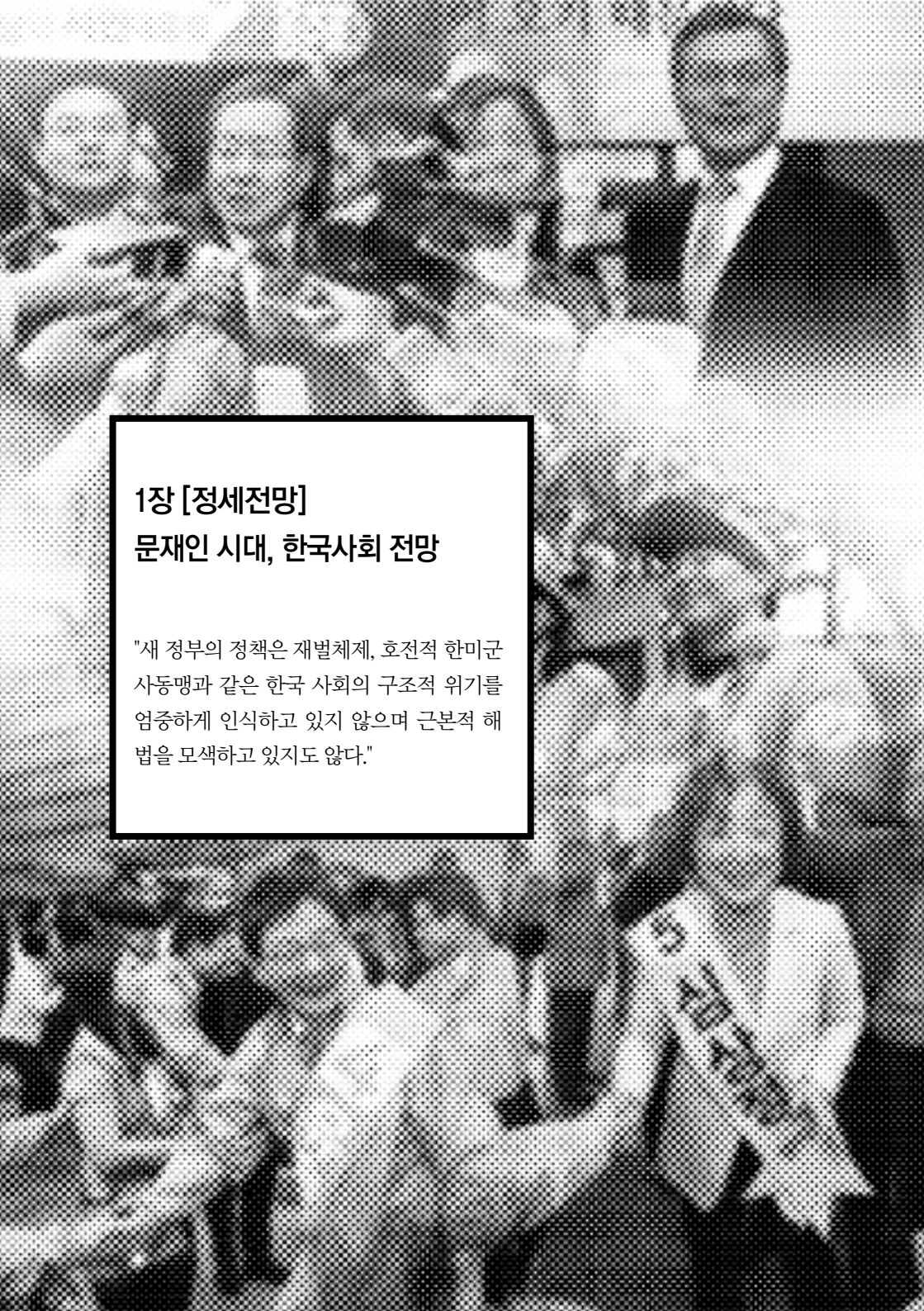
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기구 그 자체보다는 전제조건으로서 산별교섭구조의 구축과 노정교섭을 통한 제도 개혁의 현실화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노사정 대화의 경우 협의 틀보다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별 논의를 통해 의제를 사회화하고 재벌자본을 압박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실질적 평등에 앞장서자〉는 문재인 정부가 곧 발표할 ‘여성고용 종합대책’이 지난 20여 년간 역대정권이 추진한 여성노동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첫째,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주변화’를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성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일자리의 정규직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같이 재생산노동의 공적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하나의 시금석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은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노동조합의 실천이 변화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에서 여성노동자 노동권 실현을 위한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기적인 여성조합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모범단체협약

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직화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쟁 위협, 노동자들의 ‘평화연대’로 맞서자〉는 한반도 위기를 향한 초침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강행할 경우 ‘군사적 옵션’이라는 미명으로 무력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최소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출범 당시부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내걸었다.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은 한미 군사동맹이 무모하게도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일체의 계획에 반대하고, 동시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핵무기를 개발·도입·배치, 보유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지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탄생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만큼, 군비경쟁과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한미일 노동자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임필수



1장 [정세전망] 문재인 시대, 한국사회 전망

"새 정부의 정책은 재벌체제, 호전적 한미군
사동맹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 해
법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다."

촛불항쟁으로 인한 조기대선(5월 9일) 이후, 반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76.4%, 부정평가는 19.9%였다. 리얼미터에서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국정지지율 또한 9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10월 4주차 기준으로 67.2%다. 올해 초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 지지 여론과 비슷한 비중이다.

실제 어떤 변화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나? 지난 10월 17일 경제개혁연대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다”(40.4%)보다 높았다. 이어 “정부 일자리정책이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52%)이 “그렇다”(42.2%)보다 높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응답이 각각 56.9%, 59.7%로 전체 평균(53.5%)보다 높았다. 자영업·가사·무직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도 부정적 평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제시되었다. 또 국회에서 개헌안 도출에 합의

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직은 실제 국정 운영 성과보다 향후 진행할 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 커 보인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까지는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개혁과제를 실행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민주연구원,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2017).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선 대내외적 조건의 제약과 반대 세력의 저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되는 국정방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경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계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를 장기 저성장이란 위기에 빠뜨린 재벌체제 문제를 회피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주체인 노동자의 노동3권(노조 할 권리) 문제를 우회한다.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인의 공약부터 이런 한계가 드



러났으며,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비판해왔다. 집권 이후 현재까지 행보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검토해보자.

3% 경제성장 구현, 지속가능한가?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 상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 내년은 3.7%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보다 낮던 실질성장률(마이너스 GDP갭)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함으로써 일정 정도 추세를 회복하는 경기순환적 회복 국면이 전망된다.

한국 역시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두 자리 수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도 역대 고점을 찍고 이젠 2500선도 넘었다. 지난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은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3% 성장을 전망했던 데서 1달 만에 0.2%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세계 경제

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지난 2007년의 2.1%보다 낮 미국도 2%에 못 미친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글로벌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성장률이 0.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낮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2000년대 초 5% 수준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다.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부족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특성상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기 어렵다. 삼성과 SK는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대거 신설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D램 반도체 단가는 올해가 정점, 시장 규모는 내년을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 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기도 하다. 2016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5%인 반면 애플은 14.4%에 그쳤다. 하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체 영업이익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애플은 79.2%인 반면 삼성전자는 14.6%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를 지적한다. 수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는 4가지를 꼽는다. 첫째, 중국이 자체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 변화 요인, 둘째, 한미FTA 재협상과 셰이프가드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 셋째, 주력 수출 8대 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품목이 많아지는 점,

마지막으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출구전략과 미국의 통상압력이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2015년 말 제로금리 출구 정책을 시작한 연준은 3차례 금리를 인상해 2017년 11월 현재 1.00~1.25%까지 올렸고 12월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 1.25%를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연준은 또한 지난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통한 양적완화 출구전략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하고, 신흥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거품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감세와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라는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로서는 이자율 상승, 달러가치 평가절상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다. 또 한국, 중국, 멕시코 등 대미 흑자국에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확대하고 NAFTA, 한미FTA 등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회복 추세를 보이는 최근의 경제상황은 외교·안보와 국내 정치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문재인 정부에겐 큰 힘일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북핵 리스크에도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경제수석이 직접 기자 브리핑까지 했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세로 인해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과 코스피 지수 최고가 경신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장기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너

무나 안일한 태도다.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안보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경제위기가 바로 해결되었단 말인가?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이나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터뷰 등을 보면 수출, 투자의 회복세만 언급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기술혁신 둔화, 수출품목의 편중 및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고용 없는 성장’의 성격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증권시장 호황과 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상태이지만 그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팽창과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이 문제를 확대재생산 해온 재벌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반성장, 공정성장과 같은 모호한 수사로는 가능하지 않다.

사람중심 경제의 모순과 한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본격적 평가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성장과 구조 두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끈다. 구조는

일자리 중심 경제와 공정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로써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성장부터 살펴보자.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 등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혁신성
장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다양한 혁신성장 대
책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의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방안, 제조업 부흥전략 등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정체가 불분명해 창조경제론과 똑같다는 비판이 많다. 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내정자인 홍종학은 정작 본인의 중학생 딸에게는 건물
을 물려줘, 정부의 공정성장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기
술혁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은 의료민영화, 환경,
안전, 인권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에 돈을 쓰지 않는다. 재벌의 상징인 삼성
의 최근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지주
회사 전환을 포기하고 대신 주주이자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요구한
자사주 매입·소각과 적극적 배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총 50조에
가까운 자사주를 4회 차로 분할해 매입, 소각하고 있다. 내년부터
배당을 올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이사회가 승인했
다. 사장단은 이견희 세대에서 이재용 세대로 전면 교체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지주회사 전환은 현재 재판

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유보하는 대신,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면서 현재 재벌체제를 온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실제 재벌가족의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지난 1년간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이견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은 2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실제로는 재벌이 정권의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미래전략실 해체 등 경영 쇄신안을 내고, 롯데가 지주회사 전환을 했지만 이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뿐 재벌총수의 전횡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채용은 삼성 경영진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 했고, 현대차의 순환출자 구조는 변함없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신규 순환출자 해소 등을 세부 과제로 약속했으나 성사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몰아치기식 규제는 하지 않겠다. 선제적 변화를 보여라”면서 비교적 온건하게 출발했다가 내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며 점차 표현이 강경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5대 기업 간담회에서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통해 상속증여세,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가문의 경영권 승계보다는 대기업·프랜차이즈의 갑질, 불공정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장하성이나 김상조와 같은 경제 관료들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대추구행위라는 비시장적인 특혜 추구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재벌의 지대추구 뿐만 아니라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인상 요구도 포함된다. 현재 임금격차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에 있다는 정규직 양보론, 노동유연화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론을 변형한



개념이다.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같은 개념과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로 모순된다. 실제

임금을 가계소득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변형했는데, 가계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불로소득도 포함된다.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건물주의 임대소득,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 등이 모호하게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비가 늘면 생산도 늘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소비가 투자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경로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단기 경기부양정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혁신성장론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 측면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공급측면이 혁신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규제완화 정책과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사람중심 경제는 좋은 말을 모아놓았을 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승계를 직접 규제하려는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요 기관투자자가 경영권을 견제하도록 할 계획이나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미 삼성 사례와 같이 재벌은 오너 집안의 이해와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중이

다.

특권과 지배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재벌체제가 온존한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도, 혁신성장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다가올 새로운 경제위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신자유주의 유연안정성 강화 외에는 없을 것이다.

대책 없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

최근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권력을 공고히 한 시진핑과의 미중정상회담이었는데, 북핵과 무역불균형이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다지면서 견제와 압



박에 합의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원론을 재확인 하는 수준의 결과는 이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수정찰기, SM-3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고, 미국이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한미 연합 훈련의 지속 실시를 강조했던 10월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되고 참수작전, 방공전, 대잠전,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전쟁연습’ 무력시위는 북한이 다시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하는 빌미를 만들 뿐이다.

정부는 이 합의를 전작권 환수, 독자적 전쟁억지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에는 이미 차질이 생겼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내년에 미래연합군사 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이 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안부터 무산되었다. 이미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임기 내’ 전략권 전환 공약은 ‘최대한 빠른 시기’로 조정되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기(Stars and stripes)도 “한국이 이끄는 한미 연합군이 (미국이 이끄는 것보다) 북의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박근혜 정부부터 구축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른바 3노(NO)를 공개 표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드 갈등이 일정 봉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한중 군사·채널을 통해 협상한다.”라고 밝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화국면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 9월 15일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상태고 Tillerson 국무부 장관이 “대화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언급에 크게 주목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정영수 노동

상부터 서기관급 관리까지 세세히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 해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의해 국무부는 6개월마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갱신한다.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하원에서는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까지도 금융거래를 봉쇄하는(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워비어법을 통과시키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진핑 2기의 중국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것은 '신형국제관계'다. 이는 덩샤오핑 때의 '도광양회'(道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1990-2000년대 초반의 '유소작위'(有所作為·해야 할 일은 나서서 이뤄낸다)기조에서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로 향해가는, 전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적어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규모나 군사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시진핑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아베의 총선 압승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긴장 고조의 요인이 될 것이다. 자민·공명 연합여당은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313석(자민 284, 공명 29)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310석)이상을 확보해 개헌 발의선을 넘어섰다. 아베는 지난 5월 3일(현

법기념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중국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엔 제재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기반인 금괴, 금 정광(불순물 제거 후 품도 수준을 높인 광석), 납, 아연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주요 외화벌이 품목이던 석탄과 의류 섬유, 비단 수출까지 막았다. 그래서 석탄수출에 투자한 많은 ‘돈주(북한 신흥 자본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내수 시장은 식량 가격이 안정되고 석탄이 내수로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유엔 제재가 지속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생존의 보루로 여기고 일관되게 실험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은 지난 4-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군비경쟁과 핵무장 시도를 제어하는 국제적이고 대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는 비록 일시적인 긴장 완화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길을 잃은 적폐청산 논쟁

지난 10월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고, 이재용, 정호성 등은 1심 선고를 받았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집단 사퇴를 하고 박근혜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선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재판이 재개되고 있고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정점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으며 4년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관진 장관은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은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김무성 계의 자유한국당 복귀로 반토막이 났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계와 호남중진(박지원 등) 간 갈등이 수차례 발생하다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보수통합론 반대여론이 여전히 매우 높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다른 야당과 차이를 벌리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집권 이후 보고서에서 향후 정치적 갈등 구조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쟁점입법가

결 가능 의석(180석)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 가결 의석(과반수)에도 한참 부족하다. 따라서 국회정책연합을 구성하든가, 최소한 국회 ‘비토(거부권)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비토연합의 가능한 유형으로 ① 개헌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② 적폐청산 반대를 고리로 하는 연합 ③ 대북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이전에 따른 연합을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을 주도하고 야권을 압박해 내년 예산안 및 개혁입법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이 외쳤던 적폐청산 요구는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였다. 물론 이명박의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사드 졸속 배치나 재벌을 온존하는 경제정책 등 중요한 정책은 정작 보수정권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 내세우다가는



진짜 필요한 개혁의 힘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왜곡될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개혁실패의 책임을 이른바 ‘적폐세력’에 돌리고 이들에 대한 원한의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몰두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극우세력의 자양분이 될 것이며, 똑같은 정치보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후보 모두가 박근혜-이재용 게이트가 1987년 체제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개헌 공약을 내세웠지만 개헌 논의는 실제로 지지부진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30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본회의 처리’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공회전 중이다. 정부형태 분과(헌법 내 권력구조를 논의함)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명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고, 1명은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전문에 포함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으로 ‘촛불시위’가 거론되자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부 발의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와 같은 대립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4년 중임제 개헌이나 지방분권 개

헌안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 실내용은 대통령에 지나친 인사권이 편중된 권력구조 개편이나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와 같은 애초의 개헌 취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

경제·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비상사태를 외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기의 주범이 되면서 몰락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정부의 정책은 재벌체제, 호전적 한미군사동맹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이전 보수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기계약, 자회사 방식 등 실질적 처우개선은 최소화하거나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화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 등 한계가 많다. 또 사회 서비스 공단과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후퇴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노조 할 권리의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등은 오히려 상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론적, 정책적 쟁점을 형성하고,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를 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수라면 대내적 조건이 그나마 나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다. 촛불투쟁의 동력과 보수야당의 자멸로 인한 높은 지지율, 경기 순환적 회복 국면 등 행운에 가까운 개혁의 호조건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지배계급조차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사회운동이 다시 역량을 회복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대안적 사회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운동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친노동정책, 갑질 규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기업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피해를 입으므로 노사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노동자 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고 노동자운동의 힘을 약화할 것이다.

저성장, 불평등, 실업 등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조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반대만 하다가는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노동자 간 단결을 확대하고, 노동자 간 격차 축소라는 성과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가오는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선거는 이러한 방향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김태훈



2장 [총론]

민주노총 20년, 평가와 과제

"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게, 강한 의미에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

2007~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대중적 저항이 확대되었다. 노동정책을 포함해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9년간 집권한 보수 세력이 경제정책의 전환에 실패하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면서 촛불 저항 속에 퇴진하였다. 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변동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이 형성되고 유지되던 조건도 변화하면서, 민주노총이 추구해야 할 전략도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 운동이 내부·외부적 모순과 압력에 의해 균열·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은 10년이 지나지 않아 전국적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서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했고, 1년 만에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노동운동의 축적된 역사와 학생운동 등 급진적 사회운동과 결합하면서, 한 축으로는 공단의 중소기업, 또 한 축으로는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이 진출하면서 형성되었다. 당시 기업별 경제투쟁은 공단 및 전국적 연대투쟁

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귀결되고, 민주노조 운동은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확대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불붙은 1987년은 3저 호황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곧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처하게 된다. 재벌의 과잉축적(투자)과 경제력 집중의 결과였다. 곧 정부와 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도 이런 맥락이었다. ‘문민화’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따라 노사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신자유주의 노동신축화와 교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는 1996~97년 총파업을 통한 대중적 거부와 중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지금으로부터 바로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속에서 98년 2월 ‘노사정합의’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부활한다.

1987년 이후 민주노총 건설까지, 민주노조 탄압은 전노협에 집중되었다. 이는 지역연대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사업장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설립되는 1995년에 이르러서 민주노조운동은 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 노조가 이미 주도하고 있었다. 그 이후 20년 간 정세의 변화, 일부 영역에서 새로운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기본 구성은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기와 투쟁 속에서도 꾸준히 조직이 확대되었다.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더욱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공기업 노조(특히 기간산업, 즉 철도, 발전, 가스 등)의 합류와 공무원노조 건설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재벌 대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확대되었다. 한편 비정규직은 제조업(사내하청, 금속지역지부), 지역일반노조, 특수고용(건설, 화물), 공공부문(학교, 지방자치체) 등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조직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7년 지금, 결과적으로 여전히 수출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 등이 민주노총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세계자본주의 위기 이후 정세에서는 경제위기의 상쇄요인이 수출부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예를 들어 대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거나 틈새전략에 성공한 수출부문 제조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부문) 그 결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부문에 대중적 토대가 집중되고, 임금 하락과 비정규직화가 가속된 다수(일반적)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건인 셈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절대 수는 증가했지만 조직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특히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조직률은 격감한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그리고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산하 산별조직)에 어떤 전략적 한계가 있었기에 조직률 확대, 즉 노동계급의 조직적 단결의 확대가 정체되고, 또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구성과 민주노총 조합원 구성이 괴리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다.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경제력은 재벌에 집중되고 금융화가 심화되었다. 일부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고용불안이 만성화되었고 노동시장의 분할과 격차도 심화되었다. 나아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본주의 황금기라든지, 혹은 남한경제의 3저호황과 같은 국면이 상당 기간 가능하지 않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기에 형성된 노조의 전략, 즉 기업별 교섭, 기업별 (전투적) 투쟁을 통한 임금극대화라는 전략은 여전히 주류다. 이 전략은 더 이상 예전의 성과를 쟁취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물



론,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의 전략이 되기도 힘들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이다. 비단 경제 성장기 전략에 대한 정세적 재검토만이 아니라, 노조의 임금정책에 관한 ‘트릴레마’(노조가 임금극대화, 임금평준화, 완전고용(고용창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나머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전략은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를 기업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임금과 고용의 모순을 기업 외부로 ‘외주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IMF 구제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재벌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자 민주노조 운동은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로 이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기업별 임금극대화-평준화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여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냐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강화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추상적 구호나 이데올로기로는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투쟁을 함께 조직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각종 지표가 증명하듯 노동시장에서 임금·고용의 양극화는 심

화되어 왔다. 기업체 규모와 고용형태가 분단선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자본의 분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선차적인 원인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를 끌어올리고 올해 큰 폭의 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그 이상으로 격차를 저지하거나 완화할만한 구조적인 해결책, 전략을 거의 개발하지 못한 것도, 조직 내 합의를 풍부하게 형성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거시적 정책은 물론 사업장 단위의 미시적 교섭 정책까지 일관된 전략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저임금이든 고임금이든 기업별 임금인상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또한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저임금이 기업·산업의 낮은 수익성 및 노동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시장체제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노조로서 할 수 있는 교섭, 투쟁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민주노조운동이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최근에는 정부·자본에 의해 원하청 임금공유 협약 같은 사례(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사례)가 그들 입맛에 맞게 홍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세대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87년 노동체제의 주력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수혜자

인) '정년연장'에 의해 잠시 지연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화와 저출산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지배계급도 해결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신입사원 외에는 새로운 세대, 청년층에 일반화된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전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와 같은 시도도 민주노총의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설 20여 년,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

앞서 진단한 바와 같이 1987년 대투쟁과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은 과거와 달라진 내부·외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운동 구조와 의제, 주체, 모든 측면에서 혁신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의 노선이었던 전투적인 기업별 투쟁을 통한 임금극대화 전략과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운동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운동 방향을 혁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기업·공공부문의 기업별 교섭·투쟁을 넘어선 초기업 교섭·투쟁으로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단결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서라도, 또한 이를 통해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돌려주고 기업을 넘어선 노동조합으로 조

직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의 교섭·투쟁·조직운영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자고 제안한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교섭과 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정책 요구를 수립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임금투쟁에 있어서도 노동자 사이의 격차 축소와 단결을 위해, 초기업 노조, 초기업 교섭 실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정액임금 인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에 노동조합이 사실상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을 통해 기업 내 임금극대화(정규직 조합원에 제한된) 고용안정을 추구했던 입장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임금인상 투쟁은 기업별 임금 투쟁만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 지역 생활임금, 산별(최저)임금 등 여러 층위의 초기업 임금제도를 강화하면서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업종별로는 건설노조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과정에서 노동표준 형성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업 임금기준을 쟁취하는 투쟁을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노동자계급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분단, 양극화를 노동조합을 결성(가입)을 통해, 민주노총

을 통한 투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전망을 한국의 노동자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실질적인 투쟁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처한 상태(특히 경제정세와 노동시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전략 수립 능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최근 정세에서 민주노총보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이 한국 노동시장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관점에 따른)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운동 진영은 진보정당운동의 분해와 진보적 학술운동의 침체로 인해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대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인 노동시장, 노사관계(이들 제도와 관행을 포함한 노동체제)에 대한 전망과 정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임금과 고용, 사회보장에 대한 체계적인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쟁 전술 측면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산하조직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고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금속·공공과 서비스,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조직노동의 총파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투쟁 전술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쟁점을 검토해보자. IMF 구제금융 위기로

정리하고·과견제를 합의하고, 그 이후에도 노동계약의 도구가 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당연하다. 그런 한편, 민주노총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조직적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과 (단체협약을 뛰어넘는) 사회협약을 형성하기 위한 전술도 필요하다. 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선’으로서 사회적 합의주의(코퍼러티즘)와 ‘전술’로서 노정협·노사정협이 정세에 따라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협의구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즉 민주노총으로 교섭권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산별노조는 물론 총연맹으로의 교섭권 집중을 위한 경로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업노조 운동을 실현하자

이를 위해 운동구조 측면에서는 조직형식 완성을 추구했던 산별노조 운동이 봉착한 한계를 평가하고, 임금격차 축소와 조직화에 용이한 초기업 운동으로 산별노조 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산별노조 전환율이 거의 80%에 가깝지만, 현실에서는 기

업별 노사관계가 주류다.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산별(초기업)교섭을 실현하지도 못했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초기업적 공동 투쟁도 부족하다.

한국 자본주의 구조변화에 따라, 초기업 교섭은 실질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등 재벌과 정부를 교섭에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것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만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노총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섭·투쟁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해갈 필요가 있다.

투쟁을 통한 조직 강화, 투쟁과 조직화에 적절한 조직 편제 방안을 마련하자. 민주노총의 산하조직 편제도 기계적인 혹은 조직형식적인 구획보다는 교섭과 투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업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결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나 업종이나"라는 쟁점을 보더라도, 어떤 부문의 노동자는 지역에서, 또 어떤 부문의 노동자는 전국적인 산업 업종별 단결이 유리할 것이다.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은 특히 산별구획을 넘어, 가능한 부문부터 효과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집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복수의 산하조직이 경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영역 등이 있

을 것이다.

한편, 운동주체 측면에서는 대기업 노조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 '87년 세대'가 대거 퇴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의 노조 조직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로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을 거치되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회운동을 발전해야 한다는 고전적 원칙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운동 이념이 복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계급이 처한 현재 정세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세력화'된 최대의 대중적 사회운동 조직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페미니즘 운동, 평화운동 등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을 노동조합 자신의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변혁의 대안을 노사관계, 노동시장 영역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선 영역까지 포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주의, 국제적 연대는 전체 노동운동의 기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패 이후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이 지체된 가운데 각국에서 우익 포퓰리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등과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국가와 민족, 인종이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켜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국제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노동계급의 힘을 다시금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초민족자본에 대한 각국 노조의 공동 대응, 국내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일 정당 건설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진보 정치·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는 (정치세력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의 사회세력화에서 정치세력화는 노조 안에서 동의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한상균 집행부는 단일 진보정당을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내부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통합은 실패하고 말았다. 통합을 축

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과 분할이 확산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단일 진보정당으로 집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따라서 결국 민주노총이 당분간 복수의 진보정당과 사회·정치운동에서 연대를 강화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운동 방향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협력하고 연대하도록 촉진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 할 권리’, 노동조합 조직화로 실현하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더욱 확대된 투자와 (노조 내) 조직화 운동, 민주노총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은 시급한 과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체 규모에 따라 격감하는 조직률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집중해야한다. 조직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투자, 각급 산하조직에서 조직화 실천과 함께 미조직노동자들의 교섭·투쟁 전망을 제시해야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기업별 교섭·투쟁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별노조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할 과제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노동시장 구조)와 괴리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하청),



공공부문 외주용역, 사회서비스(보육, 간병, 요양 등), 민간서비스(판매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및 청년세대에 대한 조직화를 크게 확대해야한다. 각각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의 전략조직사업과 직결된 과제다. 이러한 영역의 조직 확대를 통해 민주노총의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동의를 조직하는 노조 내의 운동도 필요하다.

노동조합 조직 확대도 노동자 격차 축소와 노동자운동의 주체 형성과 확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노조를 확대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의 강화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 주도하는 개혁을 지속·심화할 수 있는 대중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서 조직된 노동자가 민주노총을 주도

할 수 있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훈련하고 양성해야한다. 민주노총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를 조합원으로 포괄할 때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교섭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리더십

민주노총이 운동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 즉 총노동의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정세에 맞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파성을 지양하는 대중적 리더십을 재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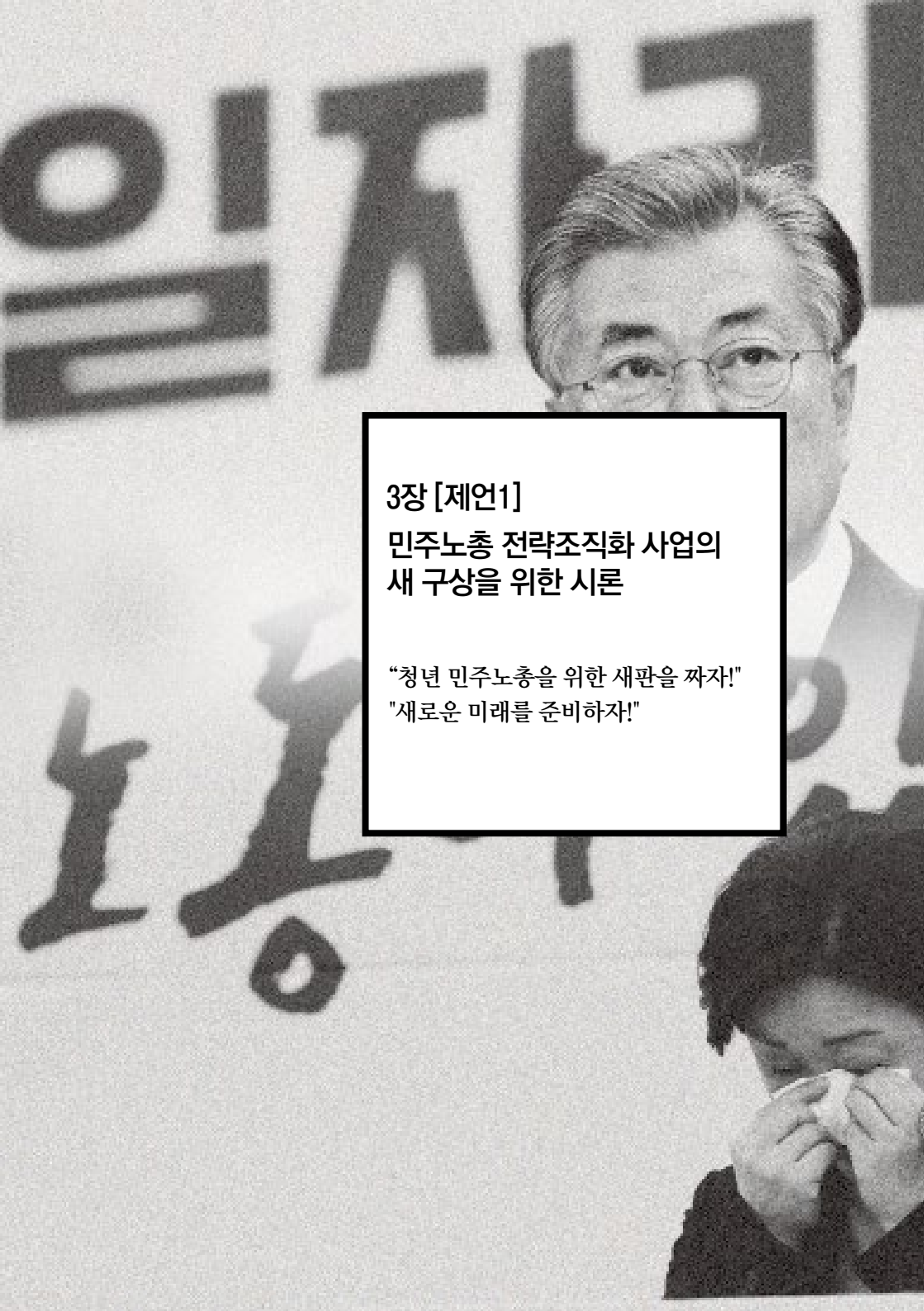
한편, 민주노총은 직선제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 외에 조직운영에서 대중성·민주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 내 각급 회의기구와 조직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집단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안에서 민주노조운동 발전방향과 실행전략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운동 내의 운동’이다.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의 문제점 진단과 운동 방향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러한 합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과거 민주노총 전략 논의에서는 추상적인 과제는 도출하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사업 과제가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총노동 차원에서 고용·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략, ‘노조 할 권리’ 쟁취와 맞물린 조직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조직 내의 합의를 형성할 과제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게, 강한 의미에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준형



3장 [제언1]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새 구상을 위한 시론

“청년 민주노총을 위한 새판을 짜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새로운 노조운동을 위한 주체형성 전략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 민주노조운동의 재건이 오늘날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이라면, 전략조직화 사업은 그 방향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은 단순한 양적인 확대가 아니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노조운동을 위한 주체형성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 한국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이후 핵심적으로 포섭당할 대상, 그래서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혹은 제공하게 될) 생산인구집단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분석할 때, 세대적으로는 25~49세를 핵심생산인구로 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고, 동시에 출산·육아·돌봄 등 가족 내 재생산의 부담을 상당히 책임지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보다 나이가 어린 15~25세 사이의 세대는 국가의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교육) 정책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주지하다시피 1960~70년대에는 15~25세 사이의 청년들은 도시화의 전개와 함께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확산 및 대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남한의 노동조합운동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조직확대에 있어 뚜렷한 변별력 있는 성장지점을 찾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세대적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조직화로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려 했지만, 이 흐름을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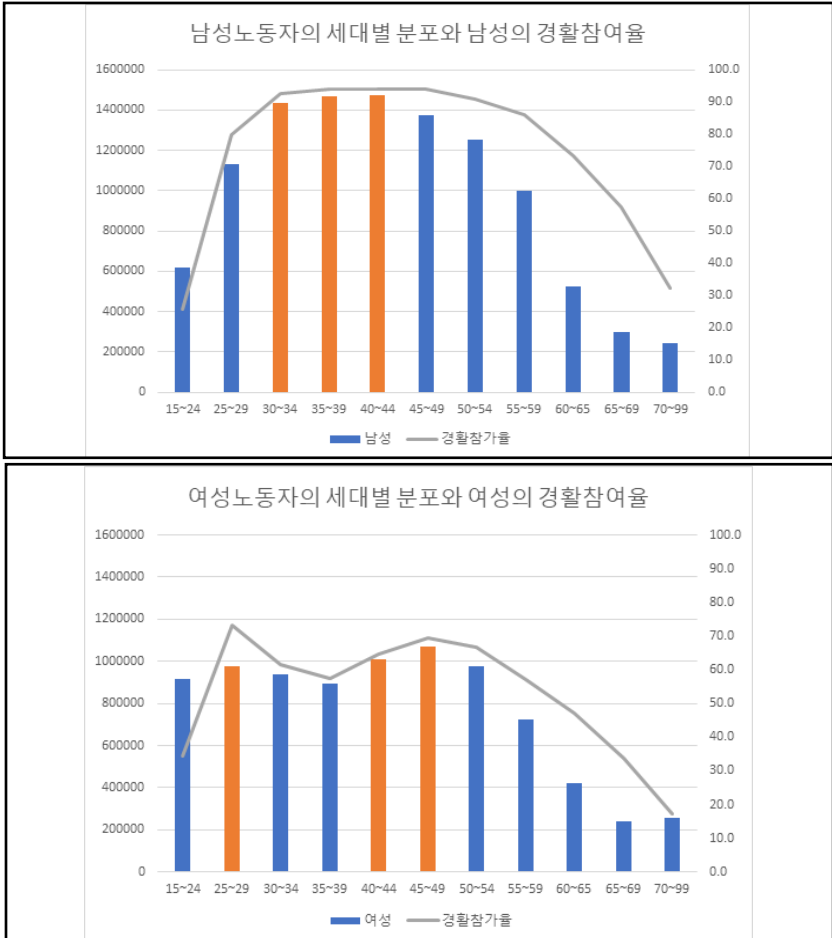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청년조직화에 대한 담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을 살필 때 잠재적 산업예비군으로서 청년(15~25세)이 아니라 핵심생산인구 중 청년층(25~39세)에 주목해야 한다. 노조 확대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착취당하고 있는 자(생산의 주역)들이 착취에서 배제당한 노동자(실업자)와 계급적으로 연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국 자본주의 체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석해보고,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청년조직화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년노동의 위치

10%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 알바와 인턴으로 표상하는 반실업 상태

가 청년노동시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기준을 15~29세에서 25~39세로 조정해 들여다보면 재벌들은 이들 중 상당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포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세대별 분포, 경제활동 참가율 (2016.3 경활부가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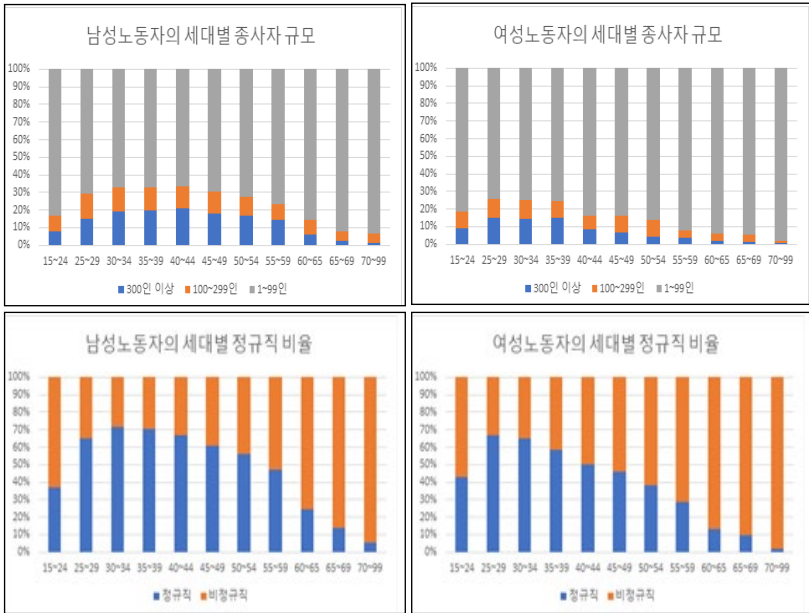
〈그림1〉에서 남성 노동자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0.3만명으로 가장 많다. 30대 후반보다는 40대 초반이 숫자는 조금 더 많지만(0.3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후반이 94.1%로 0.3% 포인트 더 높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슷하지만, 5년 간격으로 노동자의 숫자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은 높은 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를 세대별로 보면, 규모는 40대가 가장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이 73.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30대는 임신·출산 및 육아로 참여율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57.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2〉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나, 정규직 비율 모두 30대가 가장 높다. 남성의 30대 초반 정규직 비율은 71.9%로 40대 초반이 66.7%인 것에 비해 5.2%포인트 더 높다.

여성은 20대 후반의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데, 67.0%다. 이는 미세하나마 남성의 20대 후반 정규직 비율인 65.1%보다 높은 것이기도 하다.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0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자. 남성의 경우 30대 청년(40대 초반까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의 청년이 상대적으로 안정



〈그림 2〉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세대별 종사자 규모 및 정규직 비율 (2016.3. 경향부가조사 재구성)

적이고,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25~40세의 청년노동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핵심노동인구집단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청년노동시장의 특성

청년노동을 논할 때, 예비단계에 있는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가지고 청년노동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편입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아야 한다.

	전체	남성	여성
건설·제조	27.7	36.4	15.1
생산자서비스	23.3	23.7	22.8
유통서비스	16.1	17.3	14.4
개인서비스	9.6	9.7	9.6
사회서비스	22.4	11.9	37.4

	전체	남성	여성
전문직	30.9	26.2	37.7
사무직	30.4	25.2	37.8
판매서비스	15.2	15.3	15.2
생산직	22.9	32.4	9.1

〈표1〉 청년노동자의 업종별, 직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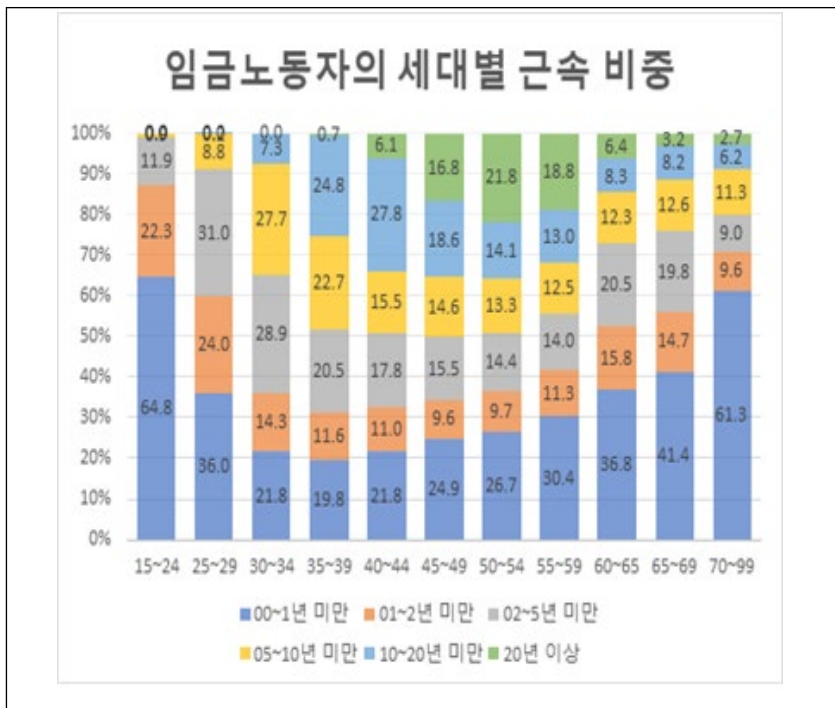
25~39세 청년노동을 살펴보면 업종으로는 건설·제조업이 27.7%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생산자서비스업이 많은데, 23.3%다. 생산자서비스업이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을 가리키는데, 4~5% 정도의 금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술, 경영, 회계, 정보통신, 시설관리 등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외주·전문화된 업종들이다.

남성의 경우 건설·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중은 36.4%나 된다. 반대로 여성은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37.4%다.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직종별로 보자. 청년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기술전문직(30.9%), 사무직(30.4%)이다. 하지만 성별로 보면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데, 청년

남성은 32.4%가 생산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년여성은 37.8%가 사무직, 37.7%가 전문직이다. 생산직은 9.1%로 낮다.

청년노동자의 평균근속은 직업경력이 짧은 만큼 중고령 노동자에 비해 짧다. 하지만 근속 1년 미만 초단기근속자 비중은 30대가 가장 낮는데,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음을 뜻한다.



〈그림 3〉 청년노동자의 업종별 근속분포

근속	전체	청년
1년 미만	30.6	25.5
1-2년 미만	13.8	16.4
2-5년 미만	19.4	26.6
5-10년 미만	15.0	20.2
10-20년 미만	13.5	11.2

근속	청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전문기술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1년 미만	19.7	38.2	32.9	30.6	18.8	32.5	16.2	23.5	25.9
1-2년 미만	15.7	15.6	16.9	16.7	16.5	17.4	13.2	16.2	16.9
2-5년 미만	26.6	22.7	28.6	20.8	30.4	27.6	18.1	25.9	28.5
5-10년 미만	23.9	15.8	14.5	20.2	26.7	14.3	29.2	17.9	19.4
10-20년 미만	13.6	7.6	7.1	11.7	7.5	8.3	23.0	16.5	9.3

〈표2〉 청년노동자의 업종별 근속분포

청년노동자의 근속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다. 건설, 도소매,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높지만, 제조, 전문기술, 공공행정, 교육업종에서는 근속이 2~3년 이상 되는 노동자 비중이 60~70%다¹⁾.

1. 근속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조직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속이 긴,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곳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유효할 수 있다. 근속이 긴 만큼 사업장 동료들과 관계도 가까워지고, 고용이 안정적인 만큼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도 효과적일 수 있다. 연대임금을 위해서는 동일 단체협약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근속이 짧은 임시·일용직 활용이 잦은 곳에서는 지역노동시장 차원의 교섭이 효과적이다. 사업장 단위보다는 직업적, 지역적 인맥이 더 효과적이고, 상담도 이와 같은 관계망을 활용해야 한다. 개별기업과 함께 표준임금협약을 목표로 하는 지역노동시장 협약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사업장 조직화는 공급사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역노동시장 조직화는 그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수출 재벌들의 전초기지, 21세기 신산업에 몰려있는 청년노동자들

자동차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고, 정규직 비중이 높은 곳은 (완성차 공장을 제외하면) 1차 벤더—모듈라인의 정점에 위치한 부품사들이고, 반도체·전자산업에서는 사급자재(핵심부품)를 만드는 곳이다. 운수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속이 안정된 곳은 인천공항처럼 복합물류센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들이다. 이상은 수출재벌 기업들이 재고 없는 생산, 기민한 생산을 위해 직접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급사슬 기지다. 여기서는 일정하게 조직화만 해도 노동조합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청년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다.

오늘날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답게 한국에서도 정부정책 차원에서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노동규율과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노동표준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양산된다. 새롭게 노동표준을 잡아가는 분야인 만큼, 새로운 노동표준 형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매개로 조직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노동조합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도 청년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다.

20대 청년빈곤을 감내하며 당장의 취업을 미루고 취업준비생

을 선택하지만, 결국 20대 후반 이들이 진입한 노동시장은 재벌 대기업들이 수직적으로 하청계열화한 부품사-운송기지들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시킨 사회서비스 관련 신규일자리들이다.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파편화된 청년알바에 주목한 사이, 재벌들과 정부는 청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노동시장에 인입시켜 놓은 것이다.

새로운 노동표준을 위한 청년들의 요구

지금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접한 노동시장은, IMF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유연화된 노동시장이다. “20대는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30대는 해고상담을 하며, 40대는 퇴직금 상담을 한다”고 할 만큼, 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노동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최소기준을 무너뜨릴 만큼 바닥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때로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위아-모비스-만도헬라 등 자동차 핵심 부품사의 청년노동자들이, 파리바게트의 청년노동자들이, 인천공항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문의를 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바는 생존권 위기보다는 인간적 무시와 모멸감,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하면서 힘들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들이다.

20~30대 조직활동가의 육성, 청년조직화센터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흐름을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화 사업으로 수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조직활동가 육성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은 1980년대, 1990년대 청년기를 보낸 40~50대 세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비전에 대한 이해방식도 다르다. 오늘날 청년들은 경제발전 전망을 상실했고 실업의 공포 위에서 가까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노동권이 후퇴하는 사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사그라졌고, 사회운동이 약화되면서 대안사회를 향한 이념적 전망도 약한 상태다. 이들을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묶어세우려면, 조직화 사업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청년조직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20~30대 젊은 청년조직가들을 별도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조직활동가 학교>와 같은 기관을 구성할 기획들 말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되고, 이들이 각급 산별·지역본부 조직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당연히 청년노동시장에 적합한 노동조합운동의 의제 발굴과 동반되어야 한다. 청년 노동시장에 필요한 의제를 청년들이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노동자, 대학생, 반(半)실업자 등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청년 노동자 대회)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동표준에 대해 청년 노동자들의 입장을 모아내고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런 활동들은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언력을 강화하고, 새롭게 연대운동을 개척하려는 형태를 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념적 급진성, 변혁적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청년 민주노총을 위하여

지금 민주노총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청년조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10년 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40%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데 이는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설사 수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민주노총의 보수화(세대적 수동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기아차지부의 사내하청 분회 분리 총회, 전교조의 기간제 정규직 전환 문제 관련 성명 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노동표준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대표성의 상실과 함께 노동시장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릴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혁신군이 필요한데, 이 역시 청년조직화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이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조 가입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노조운동을 준비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년조직화를 통해 대재벌 투쟁과 교섭력을 강화하고, 청년조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대정부 투쟁과 교섭 기반을 만들며, 청년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민주노총, 새로운 (대안)노조운동을 준비하겠다는 조직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한국의 지배세력들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노동현장을 재편하고, 재구조화할 전망을 세우고 있다. 그에 비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박준도

4장 [제언2]

한국형 사회적 대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순진한 기대 속에서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협약을 맹종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금물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동일시함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공고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동적 태도도 극복해야 한다."

2017년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성현 전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성현 위원장에 대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이끌어 나갈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상은 10월 18일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제시되어 있는데, ①노사정위원회 논의의제를 확대하고, ②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③주요 현안·과제 중심으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정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④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역 노사정간 대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해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 양대노총 대표자를 노동자 대표로 규정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10월 24일 청와대가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및 만찬 행사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노정간 대화로 논의되던 자리에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배석시킨 것, 2부 만찬 행사에 일방적으로 일부 산별·사업장을 개별 접촉하여 참여를 조직한 것 등을 비판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행사에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8자 회담’(대통령,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을 조속한 시일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조건

논의 의제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확대재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는 상대적으로 논의 의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험들과 다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노사관계와 파견제·정리해고제·변형근로기간제 등 개별노사관계를 쟁점으로 했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 역시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는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사회협약'으로 이어졌다. 2000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노동시간 단축을 의제로 했고, 2008년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2015년 노사정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이제까지 노사정 대화는 분명한 목적과 의제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 대화 관련 논의는 다루어야 할 의제보다는 협의를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시장 격차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노사정 대화 협의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확대·개편인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1월 7일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구성된 내년 1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후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에서 확대·개편 방안을 검토, 최종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거친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로는 (사회적 대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우회하는 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역시 한국노총의 '8자 회담' 제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대통령 주재 8자 회의를

또 만들 수 있겠느냐”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노사정위원회를 뛰어넘는 위원회를 또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틀은 노사정위원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에 대한 자본의 입장

한편 사용자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위촉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중요한 노동·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내놓기 주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식물 상태에 빠진 전경련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총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한 이후 사용자 측과의 대화에서 경총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총에 대해서 “한국의 노사정 문제에서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총

과는 다른 새로운 사용자단체의 탄생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노사정 대화의 주체로 경총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경총은 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원이고 짧은 시일에 경총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정부의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경총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또 다른 사용자 측 위원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27~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기업인 간담회를 주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구성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8월 31일에는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만형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언급했으며, 9월 5일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문재인 정부가 경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지나친 친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문성현 위원장 위촉에 대해서는 “선수를 심판으로 세운 꼴”,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정대화에 대한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경총은 언론을 통해 양대지침이 폐기된 것은 노사정 합의사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11월 13일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은 가능한가

유럽의 경험: 사회적 협약의 변화와 쇠퇴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회적 협약은 사실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소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의 사례로, 사회적 협약은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국내 재화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협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용자측의 적극적 참여보다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사회적 협약 형성의 선결조건이다. 사회적 대화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

해서는 모종의 보상이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보상은 대부분 직접적인 물질적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인정, 공공정책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사회적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 등이었다. 이것이 2010년대 이전까지 유럽에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던 양상이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에는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교환’조차 점차 사라져갔다. 경제위기가 일반화되었고, 높은 경상수지 적자를 특징으로 하는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이른바 ‘갑작스러운 중단’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시간에 급진적인 긴축 패키지를 도입해야 했으며, 패키지에는 임금 삭감, 세금 인상, 공공지출 축소, 단체교섭 분권화 등이 포함되어 조직된 노동조합이 감수해야 할 일방적인 희생의 범위가 너무 커진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협력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은 ‘특수 이해집단’으로 치부되면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10년대 들어 유럽에서 사회적 협의는 위기에 빠졌으며, 이는 비단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회적 협약 형성의 조건

임상훈과 루치오 바카로(Lucio Baccaro)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사회적 협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사회적 협약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협약이 출현하고 안정화되는 조건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사회적 협약은 실질임금 억제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고, 노동조합이 사회보장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등에 대한 양보를 통해 얻은 성과는 협약과 관련된 여러 정책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했다는 의미를 확보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었다.

사회적 협약의 출현에는 객관적인 조건과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국가 경제의 위기가 사회적 협약 출현을 강제하는 객관적 조건이 되며, 동시에 선거 기반이 약하고 경제 위기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약한 정부가 정책 조정을 위해 사회세력과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고자 할 때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지향 역시 사회적 협약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적 협약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우세한 상황에서 사회적 협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즉각적인 경제위기 상황, 약한 정부, 사회적 협약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조건이 결합되었을 경우 사회적 협약이 성사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협약의 출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협약의 안정화에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사용자가 사회적 협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협약의 이행·재생산에 책임을 지려 할 때에만 사회적 협약이 유지될 수 있는데,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용자측이 사회적 협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협약이 안정화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용자측은 1992년 사회협약을 지지했는데, 전국물가연동임금제 폐지와 회사 차원의 보상적 임금 인상 요구 불법화 등으로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사용자측은 사회적 협약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협약을 우회했으며, 2001년부터는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 직접 로비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협약을 무너뜨렸다.

역사적 경험: 한국에서의 사회적 협약

한국에서 사회적 협약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법제 개혁 시도였다. 유일하게 사회적 협약이 성사된 것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안인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었지만, 이 역시 잠정합의안

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그 직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탈퇴를 몇 차례 반복한 후,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적 대결을 겪었으며,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사회적 협약이 맺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껌데기뿐인 협약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사회적 협약 시도는 유럽에서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이라는 기본적인 조건 아래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와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소위 ‘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협약을 동원하는 형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조합에게는 이른바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와 같은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 금지, 3자 개입금지 등 ‘제한적 정치적 교환’이 제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보는 현실화되고 반대급부는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정치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험을 앞선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면, 1996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경우 경제위기와 같은 급박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시도되었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합의할 만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협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악 입법을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는 파국에 이르렀다. 1998년의 경우 IMF 경제위기와 미국 주도의 세계화라는 조건 하에서 일종의 ‘강제된 사회적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당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용자측의 태도였는데, 임상훈, 루치오 바카로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재벌은 위기 책임론에 처하게 되었고, 한나라당이 대선에 패배하면서 정치적 지원마저 잃었”으며,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세력이 약했다”고 평가한다. 사용자측은 노사정 협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재벌 해체를 막아내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2017년, 사회적 협약이 성사될 수 있는가

사회적 협약의 형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볼 때, 한국에서 짧은 기간 내에 사회적 협약이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장기불황기라는 구조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는 경기 순환적 회복 국면에 있고 한국 역시 이러한 조건에 힘입어 단기적인 성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회협약 체결에 시

급성·절박성이 있지 않다. 국회 및 행정부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약한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여 년간 이른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유연화를 심각하게 경험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양보할 만한 자원이 없거나 양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혹은 사회적 협약은 이전까지의 노동권 후퇴를 복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은 사용자 측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사용자측은 사회적 대화 자체에 참여할 의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활용하면서 경총을 압박하고 있지만,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모두 더 많은 노동유연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태도는 한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것인데, 이를 노동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킨 채 지대추구행위를 일삼는 재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여론과 함께 정부의 단호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벌은 정권의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구조 및 제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협약은 노·사의 능동적 대화와 합의를 전제로 이를 정치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협약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구조 및 조건이 중요하다. 사회적 협약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대체로 사회적 협약을 집권 정부가 현실화하기에 용이한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총자본과 총노동이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전국적 노사협상체계, 심지어 산별교섭체계 틀조차 없고, 사용자 측은 사업장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 더해 역사적으로 정부 및 국회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후 노동개약 입법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협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화(입법화)를 시도하거나, 1998년 사회적 협약 이후 2000년대까지의 역사적 경험과 같이 사회적 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 측에 유리한 부분만을 제도화하여 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등 사회적 대화 및 협약을 반복적으로 왜곡했다.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사회적 대화의 양상이 이전의 경험과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입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협약이 성사되어도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은 낮다고 판단된다.

노동자운동의 대응 방향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와 달리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회적 대화의 정당성,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입장,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 및 정당성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 이후 출범하게 되는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2~4년차를 관통하게 되는 까닭에 향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각 선본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번 선본은 산별교섭 제도화, 노정교섭 쟁취와 함께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틀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2번 선본은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거부 입장으로 보인다. 3번 선본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등과 관계없이 현행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주장하고 있고, 기호 4번은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교섭 정례화를 강조하고,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사정 대화에의 참여 여부보다는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후보 (위원장, 수석부 위원장, 사무총 장)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기호 2번 (이호동, 고종환, 권수정)	기호 3번 (윤해모, 손종미, 유완형)	기호 4번 (조상수, 김창곤, 이미숙)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와 원강하게 투쟁하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민주노총. · 산별교섭 제도화,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재구성. · 노사정, 대통령, 국회 대표가 참가하는 신8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대화로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분열과 약화. · 사회적 대타협은 대화·합의·타협으로 위장한 노동자 양보의 강제.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악법 개정, 노동권 전면 보장 같은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은 다루지조차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정교섭 활성화,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한 노동 정책 주도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실시, 대기업의 노동이사제 법제화 · 노동시간단축, 광주형일자리나누기, 제조업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교섭 정례화. · 사안별 노사정 대화. 현행 노사정위원회 폐기 및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 개입 · 산별·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경영참가·노정협의 제도화로 민주적 노동체제 실현.

〈 표 1 〉 민주노총 9기 집행부 선거 후보의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본적 입장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기 정부는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재벌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춰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노동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삼성 등 거대재벌은 가파르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유연화된 노동관련 법제도는 안정화되었고, 이를 되돌리려는 민주노총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본적인 노선으로 천명하면서 이전 정권들과 일정하게 달라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존중사회’, ‘일자리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역시 이전 정권들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를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빠뜨린 재벌체제 문제를 회피하고, 한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주체인 노동자의 노동3권, 즉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과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한계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자로서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역사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기초에서 ‘강제된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

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조건이 이전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구조적 조건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유산을 토대로 한 30년의 민주노조운동은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총노동 차원의 실천과 투쟁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많은 역량을 투여해 추진한 정치세력화 운동은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한 순환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적 조건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구조조정에 처한 산업부문에서의 자본의 책임성 및 총고용보장 등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촛불항쟁에 대한 대중이데올로기는 재벌체제 개혁, 노동 3권의 전면적 보장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로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 역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경제·노동 문제를 핵심 사회의제로 끌어올리고 개혁의 범위를 확장·

심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목표 주도하는 유능한 전술이 필요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함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의 목표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적 협약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유연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역사로부터 증명된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역전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에 두면서 투쟁과 교섭 방안을 입



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세력관계와 조직 내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노사(산별)·노정·노사정 등 중층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 각각에 대해서 목적·의제·기구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순진한 기대 속에서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협약을 맹종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금물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동일시함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공고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확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동적 태도도 극복해야 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①노사 대표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②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정치적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③합의의 강박관념을 버리고 협의 자체를 중요시해야 하고, ④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역·업종단위 등으로 중층적 대화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⑤초기업 수준에서 노사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⑥참여주체를 확장·다각화해야 한다는 등이다.

‘합의의 강박관념을 버리고 협의 자체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현재 사회적 협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한계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조건들로 충분할 것인지는 미지수인데, 예를 들어 2번 항목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대통령자문기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이 강화된 공적 기관의 모습을 띠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기관이 된다고 해서 협약의 제도화 경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적 대화·협약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불충분하다.

결론적으로 ①길지 않은 시일에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②사회적 협약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부재하고 논의해야 하는 의제가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정 대화 그 자체보다는 전제조건으로서 산별교섭구조의 구축과 노정교섭을 통한 제도 개혁의 현실화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으며, ③노사정 대화의 경우 협의틀보다는 다루어야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별 논의를 통해 의제를 사회화하고 재벌자본을 압박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고려지점이라고 판단된다.

2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역전시킨다는 전략적 목표에 입각하여 노동유연화 악법(3제)의 폐기,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의 핵심 수단으로서 노동기본권(노조 할 권리)의 전면적 보장,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원하청 구조의 개편과 ‘좋은 일자리’ 책임 강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청 책임 인정, 산업 구조 조정에서 충고용 보장과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재벌 및 대주주의 소유

권-경영권 청산) 등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유능하고 섬세한 전략 전술과 당당한 대중적 실천이 필요하다.●

김동근

5장 [제언3]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실질적 평등에 앞장서자

“민주노총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의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추정 463만 명이다. 그 중 상당수가 여성노동자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64%에 달한다. 여성노동자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만연한 노동 빈곤과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에서 일부 진전이 있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라는 가려진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는 늘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말해야 노동자의 권리도 온전히 쟁취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 더 많은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과 과제를 받아 안아야 한국사회의 실질적 평등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

- 불안한 고용, 벌어진 임금격차, 길어진 무급노동시간

지난 6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전체 고용률은 50.2%다.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점점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를 말해준다. 여성 비정규직은 353만 8000명으로 290만 6000명을 기록한 남성 비정규직보다 훨씬 많으며, 전년도보다 14만 8000명 늘어났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15만 4000명이었던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늘어난 여성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16년째 OECD 중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 평균임금 291만 8000원의 64.1%에 불과한 18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출산 및 육아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에게 가치 절하된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늘어난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다.

장시간노동 1,2위를 다투는 한국에서의 노동시간 역시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남녀 모든 노동자에게 만연한데, 특히 공짜야근과 조기출근 등 무급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2015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남성이 하루 40분인데 반해 여자는 194분이다. 가내 무급노동까지 계산하면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각하다. 장시간 유급 노동에 가정 내 재생산노동 시간까지 치면 한국 여성노동자의 시계

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아직도 막막하다. 한때 노동시장 진출 자체가 여성운동의 목표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여성고용률은 50%가 넘지만, 열악한 주변부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 여성이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시장의 자리를 메꾼 지도 오래다. 여성 고용 확대라는 양적 상승은 있었지만, 질적 도약은 없었고 오히려 권리는 후퇴하고 있다. 후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동안 노동조합 안에서 무엇을 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2017년 4/4분기에 발표할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다. 곧 발표할 ‘여성고용 종합대책’의 내용은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공공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항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는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공 일자리’ 중 34만개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선정했고,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

고 시급한 분야 17만개 일자리에 올해부터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 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맞춤형 일자리’중 여성 맞춤형 지원 항목에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러나 20여 년간의 역대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자본의 대응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성일자리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성노동정책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부합할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여성의 주변 노동자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화는 중년 이후 여성노동자에게 특히 심각하다.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를 보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0대가 21.4%, 50대가 22.4%, 60세 이상이 21.4%로 65% 이상이 40대 이상이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

다. 이렇게 여성을 주변 노동력으로 편입시키는 여성 노동정책의 중단이 시급한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은 여성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일자리의 정규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생각하면 이후 여성고용 종합대책도 한계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M자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후반 고용률 69.5%에서



30대 후반에는 56.5%로 낮아지고, 40대 후반에는 다시 68.6%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의 형태는 30대를 기점으로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30대부터 시작되는 여성노동의 굴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성노동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봐야한다.

최근에 경력단절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정책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여성에게 부과된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지 않은 채, 일·가사 양립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정책은 의미가 없다. 재생산노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40%까지 마련하겠다는 공공 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보육 분야만 봐도 6.9%밖에 안 되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새로 생길 국공립 어린이집만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빙산의 일각만 포장해 놓는다고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이미 민간시장이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시설로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생산노동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은 공단을 통한 시설 직영, 그리고 종사자의 직접 고용 보장이다.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과제다.

민주노총 여성사업의 진단과 과제

민주노총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여성노동자 조직화에 기여한 측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성인력 활용’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추진되어 온 20년 동안 역대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때로는 수용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후 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민주노총의 여성 사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조직화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혁신에는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주체화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 조직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들 수 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각 단위 조직화를 추진했다. 양적인 확대를 넘어 여

성노동자들을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월 1회 7개월 동안 집합교육의 형태로 간부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에 캠페인 대상 대학사업장 대부분에서 청소노동자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매년 집단교섭을 통해 동종 직종과 대비하여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인상도 이루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14만 명 정도가 있는데, 조직화의 결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규모는 7만 명 이상이다.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70% 이상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맞서,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으며 노동조합 조직화로 확장된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 이처럼 전략조직화를 통해 확장된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여성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여성위원회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위원회는 대중사업인 ‘3.8 여성의 날’ 사업을 주로 맡아오면서 조직, 정책, 교육 등 기본적인 여성사업을 담당해왔지만, 여성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로 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상설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가 성폭력 문제 해결 부

위거나 여성의 날 행사단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따라 가지 않는 독자적 여성의제 추진 단위, 여성노동자 조직화 기여 단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차별의 지표로 드러나는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 여성의 현실을 은폐·왜곡하는 여성혐오 등 사회적으로 여성억압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노조 내에서 표출됐을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주노총 운동의 과제로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대사회적 요구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조직화로 실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

할당제와 성주류화 수용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임원과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3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여 노조 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할당제는 여성임원 비율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제도 자체로는 안착했다. 하지만 할당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여성 대표성의 실내용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며, 할당제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가 조직되어 여성사업의 확대와 강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안에 따라 여성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취사선택될 뿐, 민주노총 안에서도 깊은 문제의식이 확대되지 않은 채 성주류화 전략이 수용되어 왔다.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적 영역에 여성진출을 가시화하긴 했지만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노동권이 제약되는 고유한 구조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 내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주류 페미니즘 운동의 전략을 노조운동 전체의 노선이나 전망과 별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넘어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노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가 많다면 노조할 권리를 외친다고 해도 세상이 온전히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여성노동자가 만연하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쟁취되어도 세상이 온전히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여성사업 진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확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이 성주류화 정책에 입각한 ‘기회의 평등’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임금, 노동시간 등 ‘실질적 평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시작으로 2017년 3.8 여성의 날에 제기한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문제의식을 계속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노조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할당제 실시에 머무르는 것 이상으로 여성 간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은 여성 간부의 활동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사와 육아 및 가족의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해가고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자의 단결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과 자원의 배치

현재 민주노총은 몇 년째 여성위원장이 공석으로 있고, 산별 및 지역본부의 여성사업 담당자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선거 시기 공약으로 여성위원회 강화가 빈번히 제기되지만, 추상적 구호에 그치고 만다.

실질적으로 여성위원회가 강화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 및 각 산별과 지역본부에서 여성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획하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여성교육 활성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요구를 정립하며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여성운동의 역사 등 페미니즘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정세에 대한 인식 등 전반적인 교육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때에 따라 외부 강사들을 섭외하는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 대상도 여성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여성사업 담당자나 여성 간부들로 한정되고 있다.

교육대상 및 내용까지 통틀어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남성노동자를 포함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여성노동권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3.8 여성의 날을 ‘전 조합원 교육의 날’로 설정하여, 임단협 요구안 해설처럼 여성조합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간부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여성단협 의제 해설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기획해 볼 수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여성모범 단체협약 추진과 반영

정기적인 여성조합원의 실태조사 시행이 필요하다. 간헐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체계적이지는 않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이 몇 명인지는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되지만, 전체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얼마이고, 어떤 노동조건에 있는지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조합원의 고용형태, 임금격차, 평균 노동시간 등 기초적인 실태부터, 여성 관련 단협안이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성 조합원의 통계에서부터 정책적인 부분까지 주체적이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답게 여성노동자 현실과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성위원회의 역할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8 여성의 날을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내고 해법을 모색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모범단체협약을 만들고 이를 이후 단협에 반영하여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별에서는 여성의 요구를 담아 제도개선 요구안 마련이나 모범단협안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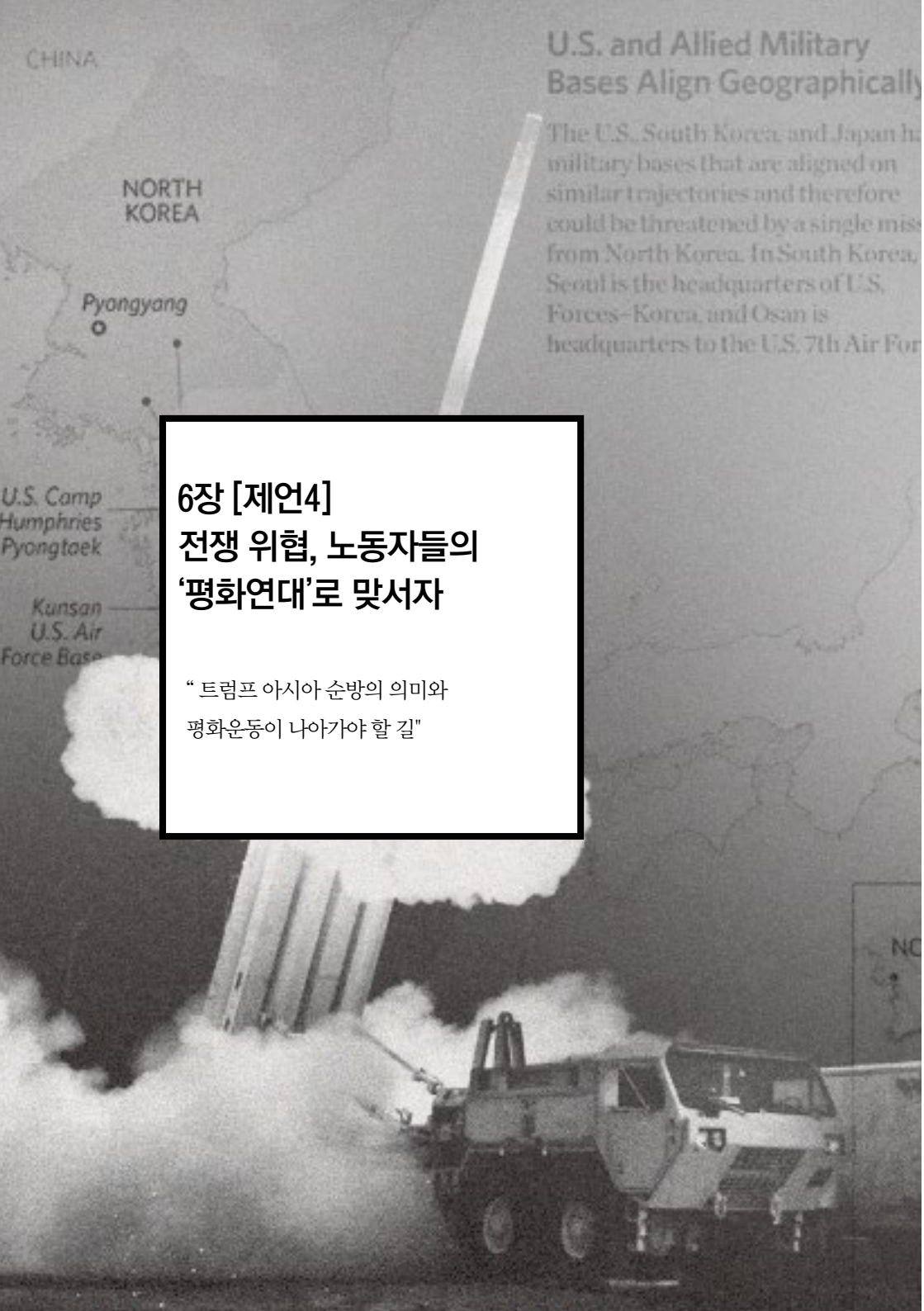
여성노동자 조직화 확대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미조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대비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41.0%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사회 노조가입률은 2015년 기준으로 10.2%에 머무르고,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비율도 24%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체 여성노동자 조직률이 2~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를 개별 여성노동자가 막아낼 수 없다. 무권리 상태의 여성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일에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여성노동자들 스스로도 노동조합을 자신의 노동과 삶에 의미를 갖는 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사회서비스 분야, 간접고용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불안정한 전자 산업의 여성

노동자, 가치를 존중받아야할 학교비정규직과 청소노동자의 조직화는 여전히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

정지현



U.S. and Allied Military Bases Align Geographically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have military bases that are aligned on similar trajectories and therefore could be threatened by a single missile from North Korea. In South Korea, Seoul is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Korea, and Osan is headquarters to the U.S. 7th Air Force.

6장 [제언4] 전쟁 위협, 노동자들의 ‘평화연대’로 맞서자

“트럼프 아시아 순방의 의미와
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언제나 무력을 쓸 준비가 되어있다는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선제공격 연습. 수개월에 걸친 공방 속에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있었다. 11월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순방이 향후 한반도와 아시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점점 변화되어 가는 정세에서 평화운동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까? 그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았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짚어보기에 앞서 미국 대북정책의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호전적인 언사만큼 정말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대화의 의지가 확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취임 전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돌입 운반체 실험이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으로 실험을 유예시키든가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협상 실패 시 북한의 실험용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 이는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면에도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레드라인은 얼마나 가까워졌나? 북한의 핵무장 수준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60여 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전배치를 위해서는 3가지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이 그것이다.

소형화 능력은 4-6차 핵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8월 화성-14호 발사로 미사일 분야에서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가 ‘길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10월 한 북한 관리가 CNN에 “미국 본토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이 달성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역설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실험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존재감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그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위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

다. 10월 19일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완성 시점이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발전 속도라면 북한의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종합하자면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군사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그 레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화의 장은 열릴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11월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중 북한 관련 논의 결과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전략을 재확인'하고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상 회담에서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다시 촉구했다. 중국과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33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며 경고장을 던졌다. 그리고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치 않지만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위에서 확인한 트럼프 대북정책의 속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쌍중단’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과 합의했다는 발표였다. 쌍중단은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것이다. 트럼프의 발표대로라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의 ‘동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진핑이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원하는 대화의 목표는 현상유지, 핵 능력의 발전 저지가 아닌 오로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혀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11월 17일, 이에 발맞추듯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의 발표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사 파견이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라는 모종의 압박과 설득



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는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확실히 당장 내일모레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던 올해 4월, 8월 상황보다는 한층 나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은 9월 15일 미사일 실험 이후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설령 대화의 장이 열리더라도 서로 원하는 수준이 다르

기에 협상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CNN과의 평양 현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할 것이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기 위한 대화’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이다. 현재로서는 핵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핵 능력이 완성된 이후에는 미국이 대화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남는 것은 ‘대화에 나오게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더욱 옥죄는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이 야기될 것이다.

당장 이번 트럼프 순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특수정찰기, F-35A 스텔스 전투기, SM-3 미사일에 핵잠수함까지 거론되고 있다. 비용은 10조 원이 넘

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순환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원산시 앞 300km 해상까지 가서 무력시위를 하여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더욱 자주 반복될 것이란 소리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탄두중량 제한 해제도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13-14일 양일 간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그 이전 11-12일은 일본 해상자위대와도 훈련을 했다. 1척으로도 어지간한 국가 1개의 공군력과 맞먹는다는 미국 항공모함이 3척이나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부분은 대북 군사행동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논의다. 지난 8월 15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이 날 ‘양국 연합참모부 대화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중 간 군사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대화가 무산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고 중국이 최소한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의 연원까지 따져 들어가면, 이러한 주변국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압박과 고립 정책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방문 날, 자금성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었다. 또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 2535억 달러 규모의 구매, 투자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순방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내걸었다.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유럽-중동보다는 아시아로 세계 전략의 초점을 이동하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새 아시아 전략을 발표했다. 이른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India-Pacific) 전략’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유대를 강화하여 ‘일대일로’를 내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공식화 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인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위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위협’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은 현실화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미국-인도 간 연례 해상 연합훈련인 ‘말라바르’에 올해부터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식 참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중국이 일부 국가들이 연합해서 대적해야 할 만한 이유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로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반대,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한국 편입 반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3불 입장을 전달했고 문재인은 수긍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청와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라고 발표했으나 다음 날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반복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미-중 간 갈등이 점증할 때,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설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평화를 위한 노동자운동을 확대하자

한반도 갈등의 초침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더욱 강화되고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강행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간 잠재적 갈등 역시 점점 더 표면화될 수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 당장은 대화를 한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평화운동이 이 정세를 변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남한 사회운동의 명실상부한 최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노동조합운동은 전쟁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일본에서 전후 미-일 군사동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의 폭넓은 ‘혐전(嫌戰) 정서’를 ‘반전평화

운동'으로 고양시킨 것은, 계급적·진보적 노동조합이었던 총평을 중심으로 뭉친 노동운동이었다. 냉전 시기 베트남전쟁 반대 여론을 만 들고, 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끝을 모르는 핵무기 경쟁에 제동을 건 것도 유럽 각국에서 투쟁한 노동조합들이었다.

민주노총도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세 대응부터 평화·통일, 반전·평화 사업을 전개해왔다. 아프간-이라크 전쟁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사드 배치 저지 등 미국 주도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또 한국사회에 만 연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뚫고 남북 노동자 교류, 연대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소 우려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비판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의 한반도 긴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고립정책과 군사적 압박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천명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라는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 패권 국가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그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일 수는 없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개발했다고 옹호하기에는, 이미 북한의 행동이 지역 내 긴장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흐름에 북한 핵개발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은 고위 지도부의 의사와 일부 핵심 과학자들의 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핵심 지도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쉬우며, 그 결과는 승전국도 패전국도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멸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른바 ‘국익’과 ‘정부의 안위’를 생각하는 국가 지도층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매우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가 역시 핵무기의 편리함, 절대적 파괴력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더 강력한 핵무기로 맞서고자 한다. 결국 악무한적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서로 불신만 확대될 뿐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축소하자면서도 변명을 일삼으며 실질적 군축에 소홀했다. 지금도 각각 7000여 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핵무기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나 지도자들의 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핵무기 갈등은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대중적 운동을 건설해야한다. ‘서로 수위를 높여가는 군사 갈등’이라는 객관적 현실 앞에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양 측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이는 출범 당시부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내건 민주노총의

정신에 합당한 방향이다. 민주노총의 평화운동이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된다. 수십 년간 호전적 군사주의를 강제해 온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핵에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사 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한미일 노동자연대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한미일 노동자들이 ‘반전반핵평화’ 동맹을 통해 전쟁 위험성과 핵무기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군비증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각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지도자들은 전쟁 갈등을 조성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선전 활동 다각화 등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기존의 남북 노동자 교류 등 통일사업 위주의 통일위원회를 반전평화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국제연대사업과 유기적인 운영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과 연대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해왔다. 이번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서도 민주노총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경험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확산해나가자. 트럼프가 주도한 세계 지도자들의 연대, 즉 전쟁과 갈등을 위한 연대가 아닌,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자.●

이준혁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 진단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2017
2017년 11월 21일

제 작 사회진보연대

집 필 김동근(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김진영(정책교육실 정책국장), 김태훈(정책교육실 정책국장), 박준형(노동위원장), 임필수(정책교육실장), 정지현(서울지부 운영위원장), 이준혁(서울지부 조직국장)

주 소 121-865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9길 14-1(연남동) 3층
전 화 02-778-4002
팩 스 02-778-4006
이메일 pssp4001@gmail.com